

코로나19 일주일 새 16명 확진... 불안감 증폭

게스트하우스·산방산은천발
 집단감염 주말·휴일 계속
 40번 확진자 도청·시청사
 방문 확인 공식사회 '발각'
 제주도 "추이 지켜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검토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않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들
 동안에만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 확산 불안감이 증
 폭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제주도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며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조정은 추이
 를 좀 더 지켜본 뒤 검토한다는 계획
 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터 30일(오후 6기준)까지 일주일
 사이 '게스트하우스·산방산은천발'
 집단감염 등의 여파로 도내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
 다.

지난 29일 하루 동안에만 4명의
 확진자(39~42번)가 발생한 데 이어
 30일 2명(43~44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40~42·44번 확
 진자는 제주 29·33번 확진자인 목회
 자 부부가 지난 23일 다녀갔던 안덕
 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은천은천 방
 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았다. 41번은
 남원읍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방
 문 이력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9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구급차를 이용 코로나19 확진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강동구 138번의 접촉자다.
 특히 40번 확진자가 제주도청과
 시청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식사회도 비상이 걸리는 등 지역
 사회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40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
 과 지난 24일 도청 청사(민원실, 노
 인장수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
 지과, 공학확충지원과,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를 방문한데 이어 25일
 부터 27일까지 제주시 본청(총무과,
 재산세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
 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과
 외청(동부보건소, 조천읍사무소, 연

동주민센터) 등 9개 부서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해당 부서는 31일 낮 12
 시~12시30분까지 일시폐쇄조치되며,
 해당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율회풍 제주도시사는
 30일 집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확
 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비롯해 장시간 체류하는 공
 간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유
 형별로 선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
 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30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이른바 '사회적거리
 두기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과 관련 원 지사는 "제주도
 는 수도권 추이와 추가 확진자 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했다.

다만 원 지사는 "지난 24일부터
 발생한 14명의 확진자는 모두 수도
 권 방문 이력이 있거나 왕래하는 과
 정에서 밀접 접촉한 사례로 모두 역
 학조사 범위 내에서 발생해 방역 추
 적 범위를 벗어난 감염자는 없다"면
 서도 "언제 방역범위를 벗어날지 모
 르기 때문에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

고. 강도 높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장은 이날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최
 근 게스트하우스와 산방산은천은천
 2곳에서의 집단 발생 사례를 주목하
 며 "현재로서는 지역사회감염이 우
 려된다. (지역사회감염)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면서
 도민들에게 선제적 검사 및 상담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집단감염 확산
 에 대응하기 위한 역학조사팀 확대
 개편 등 조직 강화에도 나설 계획임
 을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유족 등 대상 4·3생활보조비
 7월까지 52억490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6160명
 에게 4·3생활보조비로 52억4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된 287명을 포함해 생활보조비
 지급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79명
 증가한 6160명(희생자 125명, 유족
 5681명, 배우자 354명)이다.

지난 2011년 처음 생활보조비 지
 원 조례 제정 시 생존희생자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 3만원이 매월
 지급됐지만, 총 3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4·3생존희생자 70만원, 희
 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1세
 대 유족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등
 지원액과 대상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5781명에게 80억2300
 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올
 해의 경우 기존 등록자 6160명 외에
 하반기 추가 신규 등록자를 감안하
 면 4·3생활보조금은 92억여원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생존희생자
 와 고령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
 의료비, 생활보조비, 화장장 사용료
 지원 ▷국내선 제주항공료(희생자
 50%, 유족 40%) 할인 ▷주차료 감
 면 및 면제 ▷도 지역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부민·하
 귀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
 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
 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JDC, 전직 간부 일가 땅 비축토지로 매입 논란

2016년 500억 투입 선흥리 소재 31만㎡ 구입... 이권 개입 의문
 '매입과정 문제' 투서 접수... 국토부 특정감사 중 결과 주목
 고영권 정부부지사 예정자 인근 토지 매입 투기 의혹도 제기

대단위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
 업' 예정지로 주목을 받았던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JDC)의 비축토지가 전직
 고위 간부 일가 소유의 토지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
 다. 이에 따른 투서가 최근 국토부조정실로
 접수됐고, 국토교통부가 특정감사를 벌이
 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JDC는 2016년 500억원을 들여 3.3㎡
 (1평)당 50만원가량을 주고 제주시 조천
 읍 선흥리 토지 31만㎡(9만4000여평)를
 비축토지로 매입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사업비 2613억원(자체 2571, 국비 42)을
 들여 신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

나 성서는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토지 매입과정
 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국토부
 조정실에 접수됐다. 투서 내용은 명확하게 알
 려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토지는 최근 퇴임
 한 전직 고위 간부의 처가 소유의 토지로
 알려졌다. 전직 간부와 연관된 부동산이라
 는 점과 매입과정에서 토지가격 책정 등에
 이권 개입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실무 처
 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JDC에서 특정
 감사를 벌였고 현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여러 필지의 토지로 개
 별 산정가격과 매입가격 등을 공개할 수는
 없고, 국토부가 최근 특정감사를 벌였고

현재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나
 면 자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겠
 고, 감정가 산정에 있어서도 시스템상 토
 지가격을 부풀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비축토지는 고영권 제주
 특별자치도 정부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
 주도의회의 인사청문에서도 거론됐다.

고 예정자가 지난해 3~5월쯤 18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비축토지 인근 구좌
 읍 동북리 소재의 토지 3필지를 집중 매입
 하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을 받았
 다. 연예인과 관련한 카페 인근 토지인 데
 다 같은 해 6월 JDC의 스마트시티 실증단
 지 예정지 발표 3개월 이전에 이뤄진 점으
 로 미뤄볼 때 투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다.

JDC는 불투 인프라 구축과 환경자원 순
 환, 평화산업, 4차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하
 고 있다. 토지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
 인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
 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저품질감귤 유통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 조치

제주도 극조생 감귤 품질관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출하를 앞둔 극조
 생 감귤의 품질관리에 적극 나선다. 극조
 생 감귤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제주도는 극조생 감귤 품질관리 및 부패
 과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감귤
 생산농가의 캠페인 참여와 고품질 감귤 생
 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비상
 품질감귤 출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귤유통지도 단속반 13개반(총 84명)을

편성해 출하시기에 앞서 설익은 감귤을 수
 확·유통하거나, 강제 착색하는 행위, 풋귤
 유통 기간(8월1일~9월15일)이 종료했음에
 도 불구하고 풋귤을 수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극조생 감귤 외에도 출하시기가 조금 늦
 은 한라봉 등 만감류, 월동(비가림)감귤
 등에 대한 상품기준도 엄격히 적용해 출하
 하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온라인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품질 감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제주

감귤 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온라인 감귤판
 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저품질 감귤 유통으로 적발된 농가와 단
 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따라,
 과태료부과와 행·재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
 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올해 하우스온주 감귤은 가격 호조
 세(전년대비 8% 증가, 2020년 1만8162원/
 3kg, 2019년 1만6787원/3kg)를 이어 가고
 있다. 노지감귤 포전거래가가 전년대비 16
 % 증가한 가격(서귀포시 기준, 2020년
 3500원/3.75kg, 2019년 3000원/3.75kg)에
 거래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하늘을 잇다
 마음을 잇다

하늘을 잇다
 잇다
 마음을

진심을 이어온 한국공항공사

1980년, 대한민국 공항그룹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가장 안전하게, 보다 편리하게, 더욱 가까이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공항을 만들겠습니다.

KAC 한국공항공사